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모든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8.6%가 찬성하였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건강영향평가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대해 48.7%가 중앙정부, 38.1%가 지방자치단체를 들었음

-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영역은 환경 30.2%, 복지 12.1%, 문화 및 교육 15.8%, 교통 11.5% 등으로 나타났다

- 건강영향평가의 결과 공개에 대해 81.3%의 응답자가 찬성하였으며, 부정적인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평가될 경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84.4%에 달하였음

1. 조사개요

- 본 조사의 목적은 현재 『환경보건법』에 따라 일부 개발사업 및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건강영향 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정책·사업·프로그램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있음

○ 현재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폐기물처리 시설, 분뇨처리 시설 및 축산물공공처리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대기질(악취 포함), 수질(음용수에 한함), 소음·진동에 대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있음

[표 1] 조사의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기간	2011. 9. 20 ~ 9. 28
표본크기	1,000명
표본추출방법	성별·지역별·연령별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표본 추출
자료수집방법	전문 조사원에 의한 개별 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2. 조사결과

-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응답자의 38.1%가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모든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0.5%는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88.6%의 국민들이 건강영향평가 확대의 필요성에 찬성하였음

[표 2] 건강영향평가 확대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381	38.1
필요하다	505	50.5
보통이다	69	6.9
필요 없다	25	2.5
전혀 필요 없다	8	0.8
잘 모르겠다	12	1.2
합계	1,000	100.0

○ 정책수립 단계의 건강영향평가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9.8%에 달하였음

[표 3] 정책추진상의 부담을 고려한 건강영향평가 확대 실시의 필요성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매우 그렇다	170	17.0
그렇다	528	52.8
보통이다	194	19.4
그렇지 않다	28	2.8
전혀 그렇지 않다	20	2.0
잘 모르겠다	60	6.0
합계	1,000	100.0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 건강영향평가가 더 필요한 곳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건강영향평가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대해 48.7%가 중앙정부, 38.1%가 지방자치단체를 들었음
 · 이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회정책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이나 사업,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건강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표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 건강영향평가가 더 필요한 곳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중앙정부	487	48.7
지방자치단체	381	38.1
잘 모르겠다	130	13.0
무응답	2	0.2
합계	1,000	100.0

□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영역

○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영역으로 환경분야를 지정한 응답자가 3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복지분야가 12.1%, 교통 11.5%, 건설 9.5%, 산업 9.5%, 문화 8.0%, 교육 7.8%, 스포츠 7.0%, 관광 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영역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환경	302	30.2
복지	121	12.1
교통	115	11.5
건설	95	9.5
산업	95	9.5
문화	80	8.0
교육	78	7.8
체육	70	7.0
관광	44	4.4
합계	1,000	100.0

□ 정책영역별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이유

〈환경정책분야〉

○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환경분야를 선택한 응답자중 27.2%가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라고 응답하였으며, 22.8%는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어서’ 라고 응답하였음

[표 6] 환경분야를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이유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	82	27.2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키고 있어서	50	16.6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어서	69	22.8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어서	45	14.9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필요가 높은 영역이어서	40	13.2
이 분야가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16	5.3
합계	302	100.0

〈복지정책분야〉

-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복지분야를 선택한 응답자중 33.1%가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라고 응답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복지가 필요한 계층일수록 건강이 취약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표 7] 복지분야를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이유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	22	18.2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키고 있어서	19	15.7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24	19.8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라서	40	33.1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필요가 높은 영역이라서	7	5.8
이 분야가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9	7.4
합계	121	100.0

〈교육정책분야〉

-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교육분야를 선택한 응답자중 37.2%가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라서’ 라는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학교 보건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8] 교육분야를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이유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	29	37.2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키고 있어서	9	11.5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10	12.8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라서	11	14.1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필요가 높은 영역이라서	13	16.7
이 분야가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6	7.7
합계	78	100.0

〈문화정책분야〉

-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문화분야를 선택한 응답자중 25.0%가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라서’ 라는 응답을 보였으며, 22.5%가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키고 있어서’ 라고 응답하였음
- 문화정책분야는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

[표 9] 문화분야를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이유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	17	21.3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키고 있어서	18	22.5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20	25.0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라서	14	17.5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필요가 높은 영역이라서	8	10.0
이 분야가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3	3.8
합계	80	100.0

□ 정책영역별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이유

〈교통정책분야〉

○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교통분야를 선택한 응답자중 34.8%가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어서’ 라고 응답하였으며,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0.9%였음

[표 10] 교통분야를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이유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	24	20.9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키고 있어서	13	11.3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40	34.8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라서	17	14.8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필요가 높은 영역이라서	11	9.6
이 분야가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10	8.7
합계	115	100.0

〈건설정책 분야〉

○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건설분야를 선택한 응답자중 22.1%가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키고 있어서’ 라고 응답하였으며,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와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라는 응답이 각각 21.1%와 17.9%를 차지하였음

[표 11] 건설분야를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이유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	20	21.1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키고 있어서	21	22.1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17	17.9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라서	11	11.6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필요가 높은 영역이라서	9	9.5
이 분야가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17	17.9
합계	95	100.0

〈산업정책 분야〉

- 산업분야의 경우 38.9%의 응답자가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 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각각 26.3%와 15.8%가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와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키고 있어서’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12] 산업분야를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이유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	25	26.3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키고 있어서	15	15.8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37	38.9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라서	11	11.6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필요가 높은 영역이라서	3	3.2
이 분야가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4	4.2
합계	95	100.0

□ 건강영향평가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구집단

-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노인 24.4%, 아동 24.2%, 영유아 23.0% 등이었으며 청소년과 가임여성은 각각 16.0%와 12.1%으로 나타났음
 - 이는 노인, 아동 및 영유아의 경우 스스로 건강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건강영향평가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표 13] 건강영향평가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영유아	230	23.0
아동	242	24.2
청소년	160	16.0
가임여성	121	12.1
노인	244	24.4
기타(주부)	3	0.3
합계	1,000	100.0

□ 건강영향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인식

○ 건강영향평가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와 ‘필요하다’ 는 응답이 각각 20.6%와 60.7%를 차지하였음

[표 14] 건강영향평가 결과공개에 대한 인식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206	20.6
필요하다	607	60.7
보통이다	123	12.3
필요 없다	11	1.1
전혀 필요 없다	4	0.4
잘 모르겠다	48	4.8
무응답	1	0.1
합계	999	99.9

□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인식

○ 부정적인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평가될 경우 ‘정책내용 수정 후 평가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한다’ 는 응답자가 59.4%, ‘내용 수정 후 정책이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는 응답자는 25.0%였음

[표 15]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평가될 경우의 조치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전면 폐지해야 한다	112	11.2
내용 수정 후 평가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한다	594	59.4
내용 수정 후 정책이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250	25.0
그대로 실시해도 된다	14	1.4
잘 모르겠다	30	3.0
합계	1,000	100.0

3. 조사결과와 시사점

-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나, 설문조사 과정에서 건강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거친 후에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였음
 - 이는 건강영향평가제도가 국민들의 인식을 앞서가는 제도로서, 사회정책에 대한 포괄적 건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건강영향평가가 더 필요한 곳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 응답이 비슷한 비율은 보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세부시책이나 사업(project), 프로그램(program) 등에 대한 미시적 수준(micro-level)의 건강영향평가 방법이 개발되어야 함
 - 아울러 선진국에서와 같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 정책담당자들의 건강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가이드 라인(guide line)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한 정책영역으로 환경, 복지, 문화, 스포츠, 교통, 건설, 교육, 관광 등 다양한 사회정책영역이 지적되었음
 - 따라서 각 정책영역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사회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제도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정책효과 등에 대한 근거(evidence) 수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평가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을 넘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와 정책부서 담당자들의 책임감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건강영향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부정적 건강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영(건강증진연구실장)

문의(yslee@kihasa.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